

【총평】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총론과 정책학을 합하여 절반 이상의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이론에 대한 높은 이해(문제 1, 문제 4, 문제 11, 문제 12, 문제 15, 문제 16 등)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암기를 요하는 문제(문제 3, 문제 20 등)가 많았습니다. 통상 수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이론들도 제되었고, 지문을 세심하게 분석하여야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항들이 섞여(문제 1, 문제 17 등),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몹시 높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분	총론	정책	인사	조직	재무	자치
문항 수	6	6	2	1	2	3

서울시의 행정학 문제는 다른 기관의 시험보다 언제나 어렵게 출제되어 왔습니다. 모두가 어려웠을 것이므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최선을 다한 자신을 격려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시의 출제방향을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 기출문제 외에 2000년대 초반에 출제되었던 문제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이 많은 총론과 정책학은 세심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사·조직·재무·행정자치 부문에서는 실제 행정의 사례와 제도, 법령을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힘든 시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행정이념으로서의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 ① 롤스(Rawls)의 최소최대 원칙(minimax principle)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대의 편익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 ②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과 최소한의 평등 확보 측면에서 욕구이론은 수평적 형평에 대한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다.
- ③ 실적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배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실적이론은 수직적 형평의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④ 행정에의 참여와 가치지향을 강조하는 신행정론에서 주목한 바 있다.

【총론 1] 행정이념-형평성

- ① [X] 롤스의 차등의 원리는 최소극대화(Maxmin) 또는 최대최소 원칙(Maximin)을 의미한다. 최소최대 원칙(minimax)은 최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뜻한다.

- ② [O] 욕구이론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이론으로, 결과를 같게 만드는 것을 수평적 형평으로 인식한다. 실적이론이 기회 균등을 수평적 형평으로 보는 것과 관점을 달리하므로 형평성에 대한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다.
- ③ [O] 실적이론은 자유주의적 입장이다. 실적이론에서 주장하는 수직적 형평이란 능력과 노력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형평성을 결과적 측면으로 이해하는 과거의 소수 견해인데, 이번 시험에서 출제되었다.
- ④ [O] 신행정론은 1960년대 후반, 흑인 등 미국사회에서의 취약 계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이념으로 형평성(equity)을 강조하였다.

2. 로즈(Rhodes)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

- ① 정책공동체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네트워크이다.
- ② 이슈네트워크의 행위자는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이슈의 성격에 따라 주요 행위자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 ③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 형성 동기는 소유 자원의 상호의존성에 기인한다.
- ④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산출은 처음 의도한 정책 내용과 유사하며, 정책산출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다.

【정책 1] 정책네트워크

- ④ [X] 정책네트워크의 담론과정을 통해 참여자 간의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발생한다. 새로운 정보가 교환되기 때문에 처음 의도한 정책의 내용과 도출된 결론은 많이 달라진다. 정책 산출에 대한 예측 또한 용이하지 않다.
-
- ① [O] 정책공동체는 정책문제에 대해 전문적 의견과 신념을 가진 공식적인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가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동체이다. 네트워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폐쇄성),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논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지속성이 높다.
 - ② [O] 이슈네트워크는 특정 영역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견해를 가지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존재하는 의사소통의 네트워크이다. 참여자를 제한하지 않아 주요 행위자가 수시로 변하며,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특징을 가진다.
 - ③ [O]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부족한 자원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참고 : 정책네트워크 비교

구분	하위정부	이슈네트워크	정책공동체
참여자	관료, 의원, 이익집단	광범위한 다수	관료, 전문가 등의 제한된 참여
외부참여	제한	제한없음	다소 제한
상호의존	가장 높음	낮음	높음
안정성	가장 높음	낮음	다소 높음
특징	분배정책에 빈번	유동적·일시적	뉴거버넌스와 관련됨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 ②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
-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은 언론사의 임직원은 물론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④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까지 가능하고, 축의금과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인사 1] 부패·청탁금지법

- ② [X]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23조 제5항 제1호). 과태료는 행정법규의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처해지는 행정형벌과 구분된다.

단, 공직자 등이 이유를 막론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형사처벌이다.

- ① [O] 청탁금지법 제5조
- ③ [O] 공직자등은 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2.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직원,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장과 교직원·학교법인의 임직원, 3.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을 말한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청탁 수수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④ [O]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규정한다. 음식물의 경우 3만원,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과 조화는 10만원), 선물은 5만원(농수산물은 10만원)이다. 여러 가지를 같이 받은 경우에 개별 물품의 가액을 합산한다.

4. 라스웰(Lasswell)의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 ① 정책학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
- ②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은 규범적, 처방적 지식을 의미한다.
- ③ 정책적 의사결정을 사회적 과정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 ④ 다양한 연구방법의 사용을 장려한다.

[정책 2] 라스웰의 정책지향

- ② [X] 라스웰(Lasswell)은 1951년 '정책지향'을 통해 정책과정(policy process)과 정책에 필요한 지식(intelligence needs of policy)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책과정에 대한 지식은 정책형성 및 집행에 대한 과학적, 경험적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이는 과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과학적·실증적 지식이다.
- ① [O] 라스웰은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인간의 존엄성을 충실히 실현시키기 위한 지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책학을 강조했다.
- ③ [O] 정책적 의사결정은 사회적 과정의 부분이다. 따라서 정책학은 정책 그 자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정치, 문화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파악해야 하는 맥락성(contextuality)을 가진다.
- ④ [O] 문제해결에 필요한 이론, 논리, 기법을 다양한 학문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범학문적 성격(interdisciplinary)을 가진다.

5.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③

- ① 공무원들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본다.
- ② 공익은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이해된다.
- ③ 정부는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데 있어 방향잡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 ④ 법, 공동체, 정치규범, 전문성, 시민이익 등 다양한 책임성 기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총론 2]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 ③ [X] 방향잡기(steering)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NPM), 신국정관리론(NG)이다. 신공공서비스론(NPS)은 정부의 역할로 '봉사'를 강조한다.
- ① [O] NPS는 NPM과 달리 국민을 고객이 아니라 시민(citizen)으로 인식한다. 시민에 대한 봉사자, 조력자 역할을 강조한다.
- ② [O] NPS는 시민 중시의 담론적 행정 및 이를 통해 도출되는 공익을 강조한다. 시민과 관료는 모두 공동체 지향적이며 공익을 지향한다. 공익은 행정의 목표로 시민 참여와 담론을 통해 도출되는 결론이다.
- ④ [O] 덴하르트(Denhardt)는 정부가 법, 공동체, 시민 등 다원적 책임을 가질 것을 강조하였다.

※ 참고 : 행정개혁모형 주요항목 비교

구분	신공공관리론	신국정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행정가치	효율성 능률성	민주성 대응성	봉사 책임성
작동원리	경쟁과 조정	신뢰와 협력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	민주적 합리성	전략적 합리성
책임성	고객·시장 책임성	시민에 대한 책임성	다원적 책임성

6. 조직효과성의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s Model)에서 조직의 성장 및 자원획득의 목표를 강조하는 관점은? ①

- ① 개방체제 관점 ② 내부과정 관점
③ 인간관계 관점 ④ 합리적 목표 관점

[총론 3] 효과성-경쟁가치모형

- ① [O] 경쟁가치모형은 상황에 따라 조직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선택하는 모형으로, 조직의 성장 및 자원획득의 목표를 강조하는 관점은 '개방체제' 관점이다.

※ 참고 : 경쟁가치모형

구분	조직(외부 중시)	인간(내부 중시)
통제 중심	▶합리적 목표모형	▶내부과정모형
효과성 기준	생산성과 능률성	안정성과 균형
유연성 중심	▶개방체제모형	▶인간관계모형
효과성 기준	조직의 성장	인적자원 개발

7.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조직개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②

<보기>

- ㄱ.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신설하였다.
 ㄴ.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조직은 외청으로 독립시켜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었다.
 ㄷ.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부를 차관급 기구로 두었다.
 ㄹ. 일관성 있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담당하게 하였다.
 ㅁ.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조직 1]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

- ② [O] ㄱ.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신설되면서 17부처 →18부처가 되었다. ㄷ.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과학기술혁신본부(본부장은 정무직 차관급)가 설치되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통상교섭본부가 차관급 기구로 설치되었다. ㅁ.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조정되었다.
- ㄴ. [X]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산하에 두었다.
- ㄹ. [X] 현재 물관리 체계는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누어져 있다. 환경부는 수질 및 생태 먹는 물을 관리하며 국토부는 댐의 수량 관리 등을 담당한다. 현 정부에서는 예산 절감 및 물관리 전문화를 위하여 4대강 사업을 벌였던 국토부를 배제하고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8. 주민참여제도 중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②

- ① 주민소환제 ② 조례제정개폐청구제
③ 주민투표제 ④ 주민소송제

[지방자치 1] 주민참여제도

- ② [O] 조례제정개폐청구제는 199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도입되었다.

- ① [X] 주민소환제는 2006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도입되었으며 2007년 5월부터 실시되었다.
- ③ [X] 주민투표제는 2004년 1월 주민투표법 제정으로 도입되었다.
- ④ [X]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 참고 : 주민참여제도 도입순서
주민감사청구제-주민조례개폐청구제(1999년) → 주민투표제(2004년)
→ 주민소송제(2006년) → 주민소환제(2007년)

9.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주민 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민이 갖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③

- ①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자치 2] 주민의 권리

- ③ [X] 주민투표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 ① [O]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 ② [O]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와 있거나,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온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 ④ [O]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

10. 미국의 관리과학으로서 주류행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

- ① 1920년대와 30년대의 미국 행정학은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하였다.
- ② 미국 태프트위원회에서 사용한 절약과 능률은 행정관리의 성과를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됐다.
- ③ 브라운위원회에서 제시된 능률적인 관리활동은 POSDCoRB로 집약된다.
- ④ 관리과학으로서 주류행정학은 대공황과 뉴딜(New Deal) 정책 이후에도 미국 행정학에서 지배적인 자기 정체성을 유지했다.

[총론 4] 행정관리론

- ④ [X] 대공황과 뉴딜정책 이후 행정의 정책결정기능이 강조되어 정책집행 및 내부관리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리과학은 '지배적인' 행정이론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 ① [O] 우드로 윌슨(W.Wilson)이 '행정의 연구'를 쓴 1887년부터 1930년대까지 미국의 관리과학(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학)은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강조하였다.
- ② [O] 미국 태프트(Taft) 위원회는 절약과 능률을 추구하였다. 참고로 윌로비(Willoughby)는 태프트위원회의 위원으로 예산국을 신설하여 집행부 예산제도를 수립한 1921년 예산회계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 ③ [O] 브라운(Brownlow)위원회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위해 조직된 위원회이다.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최고관리자의 기능인 POSDCoRB를 주장한 굴릭(Gulick)은 3인의 위원 중 하나였다.

11.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④

- ① 포자 모형은 정책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되는 환경보다는 정책문제 자체의 성격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다.
- ② 이슈관심주기 모형은 공공의 관심을 끌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별개로 이슈 자체에 생명주기가 있다고 본다.
- ③ 정책흐름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합리성과는 다른 합리성 가정을 의제설정과정의 설명에 적용한다.
- ④ 동형화 모형은 정부 간 정책전이(policy transfer)가 모방, 규범, 강압을 통해 이뤄진다고 본다.

[정책 3] 정책의제설정 모형

④ [O] 동형화(Isomorphism)는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생존을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모방적 동형화는 조직이 보유한 기술의 특수성이 부족하거나 조직 목표가 모호할 때에 동종분야의 성공적인 조직을 모방하는 것이다. 강압적 동형화는 자원을 의존하고 있는 조직으로부터의 공식적·비공식적 압력과 사회의 기대에 따라 동형화하는 것이다. 규범적 동형화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조직이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 ① [X] 포자모형은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포자가 균사체로 성장할 수 있듯이,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면 이해집단의 권력과 무관하게 이슈가 정책의제가 된다는 것이다. 촉발장치가 마련되고 이슈창도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환경이 조성되면 영향력이 적은 집단의 이슈도 정책의제가 될 수 있다.
- ② [X] 이슈관심주기모형(Issue Attention Cycle)은 다운스(Downs)가 창안한 것으로, 어떤 이슈가 하나의 사회문제로 갑자기 등장해 잠시동안 국민의 관심을 끌다가 사라지는 경향을 연구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한 이슈가 탄생하여 소멸하기까지 다음의 5단계를 거친다. 1) 이슈의 잠복(Pre Problem) 2) 이슈의 발견과 표면화(Alarmed discovery) 3) 관심의 현저한 증가와 비용인식(realizing the cost of significant progress) 4) 대중관심의 점진적 감소(gradual decline of intensive public interest) 5) 관심의 쇠퇴(post-problem). 이슈관심주의 모형을 연구한 힐가터너(Hilgartner)와 보스크(Bosk)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희소자원으로 보고, 어떤 이슈가 공공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공공의 장(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장소)에서 다른 이슈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X] 코헨(Cohen) 마치(March) 올슨(Olsen)은 조직의 구성단위나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혼란상태를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y)'라고 정의하였다. 킹돈(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의 한 형태로,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의 비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 모형이다.

12. 정책의제설정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 ① 정책문제에 대한 통계지표의 오류는 바람직한 의제설정을 어렵게 한다.
- ② 크렌슨(Crenson)은 선출직 지도자들이 공장공해 등 전체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를 정책의제화한다고 한다.
- ③ 우리나라의 1960년대 경제제일주의는 많은 노동문제를 정부의제로 공식 검토되지 않게 하였다.
- ④ 정치체제의 가용자원 한계는 정책의제에 대한 적극적 탐색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정책 4] 정책의제 설정과정

② [X] 크렌슨은 정책의제설정은 문제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문제특성론).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보호적 규제정책)는 편익을 다수가 누리지만 비용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우로, 소수비용부담집단의 강력한 반발로 의제 선택이 어렵다는 것이다. 크렌슨은 거대한 철강회사(US Steel) 때문에 지역사회의 정치체제가 환경오염문제를 의제화하지 못하는 사례연구를 통해, 선출직 지도자들은 편익을 누리는 다수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전체문제에 대해 정책문제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공해문제, 대중교통문제, 범죄 예방문제, 정부조직 개혁문제 등이 전체문제에 해당한다.

- ① [O] 잘못된 통계로 인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중대한 문제, 시급한 문제)가 의제화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문제가 정책의제가 될 수 있다(제3종 오류). 가령, 사생활의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범죄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범죄통계가 잘못되었음에도 이를 기반으로 의제를 설정하면, 중대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문제가 의제화될 수 있다.
- ③ [O]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은 현재의 자원배분 상태를 바꾸려는 시도를 사전에 억압하거나 정책결정 또는 집행단계에서 무력하게 만드는 것으로, 폭력·경제적 보상이나 제재·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까지 경제 제일주의로 인해 복지정책, 노동정책, 환경오염 규제정책 등이 정책문제로 채택되지 못한 것은 편견의 동원을 통한 무의사결정에 해당한다.
- ④ [O] 적극적 문제탐색은 정부가 중대하거나 충격이 큰 문제를 미리 탐색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가용자원이 있을 때 가능하다.

13. 신성과주의 예산(New Performance Budgeting)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 ① 투입요소 중심이 아니라 산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 ②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과 비교하여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 ③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성과관리를 예산과 연계시킨 제도이다.
- ④ 예산집행에서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성과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재무 1] 신성과주의 예산

- ② [X] 신성과주의예산은 성과관리와 예산을 연계한 것이다. 성과주의 예산(PBS : Performance Budgeting System)은 정부의 기능활동

사업에 근거를 둔 예산으로,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참고 : 신성과주의 예산과 성과주의 예산 비교

	신성과주의 예산(NPB)	성과주의 예산(PBS)
도입배경	신행정국가(1980년대)	행정국가(1950년대)
초점	사업의 실제 성과	원가계산 등 예산편성
성과	적극적 성과	소극적 성과
책임	자율에 따른 책임	통제 및 감독 책임
중점	국정 전반의 성과 제고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성과달성

- ① [O] 성과관리는 산출 또는 성과중심의 관리로서, NPB도 이를 중심으로 관리한다. 투입요소 중심의 예산은 품목별예산제도(LIBS : Line Item Budget System)이다.
- ③④ [O] 성과주의 예산은 법규 중심의 기존 예산제도와 달리 공무원에게 집행에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관리의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예산과 연계하여 집행의 책임성을 높인다.

14. 행정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 ① 행정능력은 지적 능력, 실행적 능력을 포괄하며 정치적 능력과는 구분된다.
- ② 지적 능력은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한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행정학에서 중요한 능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 ③ 실행적 능력은 정치 및 민간 지원의 확보능력을 포괄한다.
- ④ 행정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능력요인들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정책 5] 행정능력

- ① [X] 행정능력은 지적능력(전문지식, 정보, 창의성), 정치적 능력(직접민주주의적 책임확보, 간접민주주의적 책임확보, 고객주의적 대응성 확보), 실행적 능력(리더십과 동기부여, 자원확보 및 외부지원확보)을 말한다.
- ② [O] 지적 능력(분석적 합리성)은 전문성과 관련된 것이며 전문성은 효과성과 능률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고전행정학은 이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③ [O] 실행적 능력은 집행능력이다. 정치 및 민간의 지원이 확보되어야 성공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므로, 보기의 지문은 맞다. 리더십, 관료의 행동력, 적절한 예산배분능력 등도 실행적 능력이다.
- ④ [O] 행정능력은 정책활동이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민주성과 능률성이 충돌하는 것처럼 행정능력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도 충돌한다. 전문관료를 필요로 하는

지적능력과 행동가를 지향하는 실행능력, 실적주의를 추구하는 지적능력과 정실주의를 내포하는 정치적 능력, 대통령의 의지를 추종하는 정치적 능력과 일선관리자의 재량을 늘리려는 실행적 능력은 각각 상충관계이다.

15. 정책의 유형과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 ① 로위(Lowy)의 정책 분류는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를 통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② 알몬드와 파우얼(Almond & Powell)에 따르면 조세 및 부담금 등은 재분배정책으로 볼 수 있다.
- ③ 로위(Lowy)는 군인연금에 관한 정책을 분배정책으로 분류한다.
- ④ 로위(Lowy)의 정책 분류에 따라 정책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ization)가 용이해졌다.

[정책 6] 정책의 유형과 분류

- ① [O] 로위는 1960년대 초 통상정책이 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로 설명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3의 권력모형을 제시하였고, 이를 유형화하였다. 통상정책처럼 보호, 후원, 장려의 성격이 강한 정책은 엘리트주의나 다원주의가 주장하는 정책결정양태와 다른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 '분배정책(배분정책)'으로 보았다. 엘리트주의적 정책결정행태가 나타나는 유형은 '재분배정책', 다원주의적 정책결정행태가 보이는 유형은 '규제정책'이다.
- ② [X] 국가의 정책목표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자원을 확보하려는 정책인 추출정책이다.
- ③ [X] 정부기관의 신설과 인사 및 재무에 관련된 정책으로 구성 정책에 해당한다.
- ④ [X] 조작적 정의를 내리려면 개념의 특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배분정책의 경우 엘리트주의적 정책결정행태와 다원주의적 정책결정행태가 보이지 않는 정책으로, 뚜렷한 정책결정행태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조작적 정의가 어렵다.

16. 성과평가의 방법과 모형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보기>

- ㄱ. 논리모형(Logic Model)은 직무활동이 설정된 성과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보다는 단기적인 산출물을 중시한다.
- ㄴ. 성과표준평정법(Performance Standard Appraisal)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수준을 명시한다.
- ㄷ. 균형성과평정법(Balanced Score card)은 내부과정의 관점 보다는 고객 관점의 평가방법이다.
- ㄹ. 행태관찰평정법(Behavioral Observation Scales)은 성과와 관련된 직무행태를 관찰하여 활동의 발생빈도를 측정한다.

① ㄴ,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인사 2] 성과평가의 방법과 모형

- ① [O] ㄴ. 성과표준평정법은 성과에 따라 평정을 하므로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수준이 명시되어 있다. ㄹ. 행태관찰평정법은 성과와 관련한 직무행태의 빈도수를 관찰한다.
- ㄱ. [X] 논리모형(Logic model)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로 그램이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도해로, 사업 집행의 시간 흐름에 따라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는지를 확인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적 관리를 돕는 것이다. 단기적인 산 출물보다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 ㄷ. [X] 균형성과평정법(Balanced Score card)은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고객 관점, 내부관리(업무처리) 관점, 재무 관점, 학습 및 성장 관점을 균형있게 평가한다.

17.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

- ① 행정은 최협의적으로는 행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것이다.
- ② 행정은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 분배를 통해 공공 욕구를 충족시켜 국민 삶의 질을 증대하고자 한다.
- ③ 행정의 활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적 으로 변화한다.
- ④ 행정의 활동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정부가 독점한다.

[총론 5] 행정의 의의

- ④ [X] 민간위탁, 민영화 공동생산에서 보듯이 시장과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서비스를 생산 및 공급한다.

18. <보기>에서 예산집행의 시간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③

<보기>

- ㄱ. 총액계상제도 ㄴ. 이월
- ㄷ. 전용 ㄹ. 이월제도
- ㅁ. 계속비제도 ㅂ. 국고채무부담행위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ㄹ, ㅁ, ㅂ ④ ㄴ, ㄹ, ㅁ

[재무 2] 신축적 예산집행제도

- ③ [O] ㄹ. 예산의 일정액을 다음회계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이다. 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예상된 경비에 대해 국회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명시이월과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사고이월로 구분된다.
- ㅁ. 계속비제도는 수년간의 사업을 위해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하는 제도이다.
- ㅂ.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 연도 예산확보 없이 국가가 채무를 지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이나 공사 등에 대한 계약은 당해 연도에 체결해야 하나 지출은 다음 연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국고채무부담행위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지출은 세입·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그 상환액이 다음 연도 이후 세출예산에 포함된다.

- ㄱ. [X] 총액계상제도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출의 용도를 설정하여 총액만을 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실수요를 바탕으로 내역을 정하도록 하는 예산제도이다. 결과중심 예산개혁과 관련한 신축성 유지방법이다.
- ㄴ. [X] 이월은 입법과목(장, 관, 항) 간의 상호용통으로,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함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기재부 장관 승인을 얻거나 위임범위 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다. 사업내용과 시행방법 상의 신축성 유지방법이다.
- ㄷ. [X] 전용은 행정과목간 상호용통으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없다. (단,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공공요금, 채무상환금 및 차관이자는 전용불가) 사업내용과 시행방법 상의 신축성 유지방법이다.

※ 참고 : 예산의 신축성 유지방안

사업내용과 시행방법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시기	이월, 계속비, 국가채무부담행위
결과중심 예산과 연관	총액예산(한국에 도입된 것이 총액계상 예산사업)

19. 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

- ① 행정의 책임성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과 함께 과정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
- ② 신공공관리론(NPM)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장책임성은 고객만족에 의한 행정책임을 포함한다.
- ③ 법적 책임의 확보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 ④ 제도적 책임성은 공무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책임을 의미한다.

[총론 6] 책임성

- ④ [X]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은 명시적인 행정기준 규정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여야 함을 말한다. 이는 정치행정이론론에 바탕을 둔 객관적 책임성이다.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은 행정의 기준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 직업윤리, 국민의 요구 등에 따라 가지는 자율적이고 능동적 책임이다.

- ① [O] 행정은 결과 뿐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 등의 책임을 진다.
- ② [O] 신공공관리론(NPM)은 시민을 고객으로 보며, 고객만족에 의한 책임성을 중시한다.
- ③ [O] 행정작용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과거 국회의 행정부 통제 외에 계약에 기반한 책임 등 법적 책임의 확보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서울시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서울시장은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위 ③의 경우 서울시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 3] 직무이행명령

- ③ [X] 이행명령을 받은 자치단체장에게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참고 : 지방자치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 지방자치단체장(서울시장)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③

- ① 서울시장이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주무부장관은 서울시장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한